

## 교육부,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업무혁신)' 성과 낸 직원 격려로 조직 변화 이끈다

- '이달의 우수성과 직원'으로 오명준 사무관을 선정하여 시상
-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의 거주요건 규정으로 입학 취소 위기 처했던 관련 문제를 '적극행정'으로 신속하게 해결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5월 7일(목)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달의 우수성과(Best Practice) 직원'을 발굴하여 시상한다.

이번 시상은 지난 2월 '특별성과 포상제도'의 우수사례 선정 과정에서, 실무자의 작은 혁신인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업무혁신)' 성과도 격려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매월 1~2명의 우수 성과자를 선정해 각 30만 원의 격려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현장에서 묵묵히 업무 개선을 위해 노력한 실무 직원의 '소확신' 성과를 즉각적으로 보상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 분위기를 바꾸어 나가겠다는 취지이다.

4월의 '이달의 우수성과 직원'으로는 대입정책과 오명준 사무관이 선정되었다. 오 사무관은 대입의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자격요건과 관련해 그간 반복 되던 불합리한 사례\*\*에서, 학생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 학생의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농어촌 소재 학교에서 재학하고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거주한 학생이 지원 가능

\*\*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합격·등록한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일 이전에 대학 인근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

민원 확인(3.30.)부터 적극행정위원회 심의(4.9.)와 대국민 홍보 및 대학 안내(4.28.)까지의 과정을 한 달 만에 마무리하여, 2026학년도 합격생의 입학 취소 위기를

해소하고 학습권 보호에 앞장섰다. 오 사무관은 이에 해당 조치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2027·2028학년도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적극행정 권고사항을 대학에 안내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소확신 성과가 모여 탁월한 우수성과로 이어지도록 '이달의 우수성과 직원' 선정 제도와 '특별성과 포상제도'를 함께 운영하며, 국민의 불편 사항을 속도감 있게 바꿔 나가는 정책을 추진해 갈 계획이다.

김홍순 정책기획관은 "현장의 작은 불편함에 귀 기울여 제도를 바꿔 나가는 실무 직원들이야말로 조직 변화의 핵심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확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열심히 일한 직원이 합당한 보상을 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6년 이달의 우수성과(Best Practice) 직원 선정 개요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책임자
		담당자

◆ 담당업무에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업무혁신 성과'를 창출한 실무자를  
매월 정례적으로 선발하여 조직의 체질 개선·변화 추구

- **(운영 방향)** 일하는 방식 개선과 조직의 변화·혁신 주도자들에게  
보상 정례화를 통해 우수성과(Best Practice)의 지속적인 발굴·확산 유도
  - ※ '이달의 우수성과' 제출 사례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들에게 선발하기 위해  
추진하는 '특별성과 우수사례'에 중복 응모 가능
- **(운영 방식)** 성과가 가시화된 시점에 신속한 보상과 성과확산이  
이루어지도록 대상자를 수시로 추천받아 매월(마지막주) 시상·격려
  - 매월 선발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성과 우수사례 선발과 겹치는 일정  
(6월, 11월)에는 특별성과로 수상하지 못한 상위권 대상자 중 선정 가능
  - ※ 1분기(1~3월)는 특별성과 우수사례 발굴·선발에서 상위권에 든 6건에 대해 이미  
선발하여 시상(2.23.)하였으므로, 4월부터 정례화하여 월별 1~2명 선발
- **(발굴 분야)** 기존 일하는 방식·정책·사업 개선, 국민체감도 향상, 정책  
결정·집행 속도가 획기적으로 높은 정책, 실질적 해법에 집중한 정책 등
- **(추천 대상)** 본부 무보직 4급 이하, 무보직 장학관 이하
  - ※ 일반직, 특정직, 파견 직원, 공무직 등 전체 직원(실무자) 추천 가능
- **(추천 방법)** 상급자뿐 아니라 동료나 하급자 그리고 자기 추천을  
모두 허용하고, 국민이나 이해관계자의 제보를 통해 추천 가능
- **(시상규모)** 매월 1~2명 선정 / 1건당 삼십만 원
  - ※ 신청 현황 및 자체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선정규모 조정 가능